

第250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11月19日(金)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2005년도예산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2. 2005년도가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審査된案件

- 1. 2005년도예산안(계속) 1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2. 2005년도가금운용계획안(계속) 1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2. 2005년도가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위원장 황우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총리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교육위 위원장으로서 교육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교육부총리께 공한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잠시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년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하는 과정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10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니라 11월 12일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근거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과 법률안 제출 과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원활히 행사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국회의 법안 심사는 국회의장의 소관 상임위 회부, 상임위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의 심사 등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우리 교육위원회가 11월 15일에 회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려면 원칙적으로 15일이 경과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사에 최소한 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5일, 여기에 국회 본회의 부의 및 정부 이송, 공포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발효되기까지 최선을 다해도 금년 말에 이르러서

야 법률안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2005년도 예산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면 적어도 예산안 제출 시점인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가 그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정안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사실상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표하는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약할 우려가 높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제출 형태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에 이어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의 2005년도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4조 3094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03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조 39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7조 966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조 3836억이 증가한 23조 4298억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고 3조 7477억, 인건비 1조 3457억, 기본사업비 2431억, 주요사업비 2조 1588억이 각각 계상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 68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조 5361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재정규모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서도 5%를 약간 상회하는 5.0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OECD 어느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또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목표치가 GDP 대비 6%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교육예산의 증가 추세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정부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131조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서 18%를 상회하였던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면도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인적자원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교육 분야에의 투자, 특히 유아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교육재정 대비 지방교육재정을 살펴보면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7조 9491억 원 중에서 중앙교육재정은 4조 2898억으로서 15.3%를 점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은 23조 6592억으로서 84.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 점유율 84.7%는 전년도의 85%보다 다소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사업이라든지 학생중식비 지원사업, 실업고 지원사업 등 15개 초·중등교육 보조사업비 1956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기능별 규모 및 회계·기금 상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총 27조 9660억 원 중에서 1조 5956억이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94.3%를 초·중등교육 지원에 24조 1941억, 고등교육 지원에 1조 9175억, 평생·직업·국제교육 지원에 2586억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기능별 배분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대부분의 교육재원이 인건비, 학교·교육행정기관의 운영경비 등 정상적 경비의 지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초·중등교육 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이나 평생·국제교육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별·부문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40억이 감소한 4조 309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6억이 증액된 2703억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조 391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수입대체경비 수입 등 몇 가지 개선 사안이 있는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계상 문제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수입대체경비 항목에서는 매년 초과수납과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액보다도 초과수납과 초과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세출예산 편성도 현실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국립대학 수입금의 국고 미납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에서 수입의 직접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가 아닌 이상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원칙에 의거해서 그 수입을 국고에 수납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이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근거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시로 시달한 국립대학 수입금 처리제도 개선지침을 들 수 있으나 국고금관리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동 지침은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립대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수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 부문의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의 방향을 다양한 e-러닝 지원체제 구축으로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경감 추진과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교부금 구조의 단순화·투명화 및 초·중등교육 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5년도 초·중등교육 지원예산은 20조 3859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 지원사업들 중에서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지역 교육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재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의 단순화·투명화를 위하여 종전에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교부율을 내국세의 1만분의 193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금제도의 단순화 및 교부율의 상향 조정은 지방 교육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관하여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안 심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e-러닝 지원체제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마련된 e-러닝 지원체제 종합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e-러닝 체제구축 사업들을 국가 수준의 기본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e-러닝 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부분은 인프라의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점점 교체 연한이 짧아지고 있는 정보화 관련 시설·장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인프라의 재활용 및 기관 간 통합 사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지원 사업은 교원의 평가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발적 능력개발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지원 사업은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지도력 개발이 필요한 교사에 대한 능력제고를 위한 재교육 실시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유아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교육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5년도 이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52%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되어 실시됨으로써 합리적 예산 편성의 곤란, 행정 낭비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대책 사업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상고사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그 중심 역할을 할 고구려연구재단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설립과 운영 및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총괄 지원에 대한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총 2461억 원으로 2004년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외의 국·공·사립 대학에 대한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이어 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조건을 좀더 강화하여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단년도 위주의 지원 사업을 다년도 위주의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되 연차평가라든지 중간평가를 통한 새로운 사업단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이 편성된 인적자원개발 정책 정보 교류 활성화 사업은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를 개최하고 인적자원개발 정책 소식지를 발간하며 인터넷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개최 사업의 경우 HRD 정책이라든지 e-러닝 평생학습, 과학·영재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그 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전 분야를 포괄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본래 목적과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대한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총 8307억 원으로 2004년 대비 3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은 우수 인력의 이공계 유치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신규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인바 2005년도 예산안에 1005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사업의 예산이 우수 인력의 유치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공계 대학생 학자금 용자 이차보전에 배정하고 있는 이 사업 예산의 30%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용자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교원대학 등 교원 양성이 주된 목적인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장학금 지원 예산의 25% 이상이 배정되고 있는 것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학술연구 조성사업 중 기초학문 육성 사업은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 추진되어 왔고 2005년도 예산안에는 5개년 계획하에 2004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기초학문의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인문사회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성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책임자가 기초학문의 내실 있는 연구를 할 수 있

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액의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각 대학의 인문사회학 관련 학과와 학부의 전임교원 확보에 이 예산 중 일정 부분을 활용하여 양성된 학문 후속세대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인적자원 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국 소관 기본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총 4984억으로서 2004년 대비 32%가 증액되었는데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 10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구조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립대학 간 통합 지원에 360억 원, 국립대학 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 지원에 100억 원, 대학 내부 구조개혁 지원에 500억 원, 대학 학문기반 강화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뿐만 아니라 대학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대학 회계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구조 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가 해산하는 경우 재산 출연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교·직원의 신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의 구성 및 그 추계에 있어 예산 소요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는바 실제 집행에서는 대학 내부 구조조정 지원 사업 외에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대학 학문기반 강화 사업의 경우 독립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되 그 소요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사업은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신규로 5억 원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평가를 통하여 장애학생 교육복지 우수대학 16개 대학에 대해서 각각 20명의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비와 특수교육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72개교, 학년당 400여 명이 넘는 장애학생 중에서 16개교 20명씩의 장애학생에 대해서만 도우미 지원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17% 정도에 대한 지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전체 57개 국립학교 시설 확충을 통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도 예산은 255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학교 시설지원 사업은 예산 규모 및 시설 인프라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공개를 통한 대외적 합리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국립대학 구조개혁 및 다양화·특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위한 2005년도 예산(안) 또한 5800억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시설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정책과 예산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립대학 시설지원 사업의 예산 배분과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시설 예산의 편성 과정에 대학정책 소관 부서의 참여를 제도화시키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제교육 정보화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제교육 정보화 예산안은 1009억으로 전년도 대비 2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사업비가 3억 3240만 원 감액된 19억 2123만 원이 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989억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방송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연간 6800억 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 편차 해소에도 많

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살펴집니다.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여 16개 시·도교육청 단위 또는 그룹 단위의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전산망 운영 사업은 전국대학 및 교육 유관기관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 연간 인터넷 통신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인데 나머지 통신료 70%는 대학 등 이용 기관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점차 가입기관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망 가입 기관 감소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전산망 운영비를 전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살펴집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3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의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융자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오공대 캠퍼스 이전 경비 등 430억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경인교대 부설학교 이전사업비 등 16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국립대학 이전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른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도 하나 사업의 특성상 예상치 않은 사업 지연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고 실제로도 연례적인 이용과 전용이 발생하여 왔던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대비 305%가 증액된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2004년 6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농산어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특회계 재원 중 교육 부문의 사업이 확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특회계 재원 중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당초 특별법의 제정 당시 향후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 소요를 전체 투자 규모의 20% 정도로 하여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동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농특회계 재원 중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집중육성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이촌향도 현상 예방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해서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간·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 우수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세 교육세 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2005년도 예산안은 3조 977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양여금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에 따라 그 재원인 국세 교육세 세입을 직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시키고 지방교육양여금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제도는 폐지되는 것으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2005년도부터 설치·운영되는 회계로서 지역혁신계정과 지역개발사업계정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 인적자원 분야 사업은 모두 지역혁신계정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총 483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예산액은 2500억 원이 계상되었고 상향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실제 사업단 선정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의 분과인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엄밀한 연차평가와 중간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면밀한 연차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45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 사업의 세부사업인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2004년 선정사업단에 대한 증액 예산분 20억 원은 증액의 필요성도 적고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명되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에 편성된 2005년도 예산은 1680억 원으로 2004년도부터 그동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양한 사업을 정비하였으나 2004년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대학 대부분에 대해서 1480억 원의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각 전문대학에 12억 원에서 24억 원이 지원되었는바 이 사업은 경쟁력 있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로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가 감소된 18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유학 사업의 경우 장학금 지급 기준을 여타 정부기관 사업과 근접한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파견대상 국가와 전공 분야도 민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과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다른 유사 사업과 차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본 공과대학 학부유학생 파견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이공계 고급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현재의 학부생에서 석·박사 과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05년도에 졸업하는 제1기 졸업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

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7쪽 이하의 부문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사학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조 459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표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입 계획, <표 3>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 계획, <표 4>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추정손익계산서, <표 5>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추정대차대조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금융자산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2005년도 전체 기금 운용 규모의 58.3%에 해당하는 3조 181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여유자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연금기금의 안정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 동 기금의 금융자산 관련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의 경우 수익률의 등락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주식의 경우 연도에 따라서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금의 특성상 일정한 위험관리기준을 두고 투자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 기금의 경우 대부분 운용수익이 금융자산의 투자에 기반한 것이므로 투자의 재배분을 통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경기 흐름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SOC 민자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수익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2005년에는 177억 원을 민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SOC사업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 속에서 투자 위험의 분산을 위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 운용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SOC사업을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가 양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SOC 민자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수익률 또한 기존의 15%대에서 7~8%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사업 추진 경험이 부족한 공단으로는 최대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의 영입이라든지 자체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연금적용 가입대상 확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22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가입인원 증가율은 1~2%대로 매우 미미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금 수급자 등 퇴직인원은 가입인원의 6~9%에 달함으로써 연금 지급 규모가 증가되어 기금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사학연금의 가입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유치원의 사학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가입하게 되는데,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립유치원 중 대다수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순차적인 무상교육 실시와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보조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 확대와 교직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될 경우 기금의 재정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

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하나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및 재정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 부담률의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국가 및 법인, 교직원 간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교직원 및 학교법인, 국가 등 각 부담 주체 간의 합의를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004년 1880억보다도 29억이 증가한 19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학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장에서 사학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융자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서 융자사업은 1990년에 300억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사립학교로부터 2조 7806억 원의 융자 신청을 받아 신청액의 38.4%인 1조 675억 원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2005년도의 경우 융자사업 규모를 2004년도와 동일하게 1250억 원 규모로 유지하게 되면 사학법인들의 예상 융자 신청액의 36.5%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표 7>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융자신청액 대 배정액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도 이후에 이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은 중단된 상황이고, 현재 유일한 정부 지원금인 재특예수금 역시 그 규모가 충분치 못하여 2003년도 이후에는 재특원리금 상환액이 재특예수금 지원액을 초과하게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문에 의한 기금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등 용자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기금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의 설치 근거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이 정부 출연금, 차입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사학진흥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서 기부금 또는 채권의 발행 등 다양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사학진흥재단은 이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기금 재원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자대상 사업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용자지원 시 강의실 등 교육기본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용자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바, 2003년까지 지원된 시설사업별 용자배정 내역 중 교육 기본 시설에 총 배정액의 58.4%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기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지원대상 선정 시 기본적인 학습 공간을 이루는 교육기본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고등 교육의 경우 기본적인 학습 공간 이외에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각종 시설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동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시 교육기본시설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지원 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역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사립학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영세한 사립대학교 및 사립전문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구조 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대학들의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용자심사 계에서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조치들을 인센티브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를 준용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질의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복기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복기왕 위원 어제 각종 일간지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 항상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을 매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지만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위원님과 제가 경북교육청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함께 자료 요청한 것이 각종 언론에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다른 언론이라기보다는 조선, 동아, 중앙, 문화, 이 4대 일간지에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4일 경북교육청 교구 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감사를 벌였고 저도 저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을 모두 할당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기 전에 경북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고, 지연했고, 맨 처음에는 “트럭 23대 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올려 드릴까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다 결국 A4 네 박스 분량의 자료를 주었고 그것을 근거

로 저희는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북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최순영 위원과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저는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확인 감사장에서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다시 확인감사하기 위해서 10월 19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까지 아무런 양해—구두 양해나 혹은 서류상의 양해—도 없이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경북교육청에서 보인 행태는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맞고 말자, 알아서 할 테면 해 봐라 하는 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 달여가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30만 장이라는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 때문에 한 20일 가까이 행정이 마비됐다 이렇게 근본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 전에는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지연하고, 또 공동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교육청의 직장협의회라는 데를 방패막이 삼아서 10월 14일 당시 국정감사장 밖에서 대단한 소란을 떨기도 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로 호도해서 경북교육청의 근본적인 비리 행태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과 저만의 지적이 아니라 향후 국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그로 인해서 국정감사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고 상실될 우려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면서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위원들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이 지연이나 거부의 모습을 보일 때 국정감사 기관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30만 장이라는 자료가 과연 부풀리지 않은 실제 자료인지, 최대한 그 자료를 축약해서

감사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정리를 한 자료인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허수가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낼 것이고, 차제에 경북교육청의 근본적인 비리의 굴레를 벗길 수 있도록 헌법기관의 명예를 걸고 경북교육청에서 보낸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열린우리당 전북 익산군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이 27조 9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보면 기본경비가 90.3%이고 실제로 소프트웨어인 사업비에 투입되는 돈은 겨우 9.7%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총액은 큰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의 시설비를 과거에는 국가 예산에서 지급했지만, 연기금이나 민자가 포함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연기금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사업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삭감이 되지만 그만큼 교육부에서는 그 돈을 사업비로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이 연기금으로 돌려지면 절감하니까 그것을 또 배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복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저희들이 시설 사업에 연기금이나 민자를 활용해서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예산에는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민자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자금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연기금으로 하면 원래 국가 예산으로 나가야 될 것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의 정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업비로서 그만큼 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 입장은 제가 수차, 평소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학의 경우는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 투자가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소프트웨어 쪽의 집중적인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예산 편성에서도 그쪽에 기본적인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은 저희들이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조배숙 위원 정부에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육부에서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총액,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에 와야 될 그 액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갖고 그만큼은 또 다른 분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는 워낙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 중국도 동북공정으로 우리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우리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02년도에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발생하니까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여론이 잠잠해진 2003년도에는 9억 2000만 원으로 삭감했고, 2004년도에는 다소 증액된 1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져서 교육부가 예산을 더 책정해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올해보다도 5억 정도가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셨는지,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역사 왜곡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역사 왜곡과 연관해서는 우선 중국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일본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고구려연구재단을 위해 저희들이 60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형편으로 보아 비교적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본과 연관해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했고 이 공동연구위원회에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는 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분의 운영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칠레 산티에고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가 있을 때도 제가 가는 길에 일본 문부과학성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토론했고, 산티에고에서도 3국 교육부장관회의를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인 글월입니다마는 글을 보내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를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고구려연구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된다는 말씀인데 활동이 5월에 종료된다고 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좀 반영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NEIS 시스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교원단체와 협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NEIS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한 결과 국제 표준 기준인 80점보다 낮은 61.42점, 70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취약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저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 9600만 원에서 2005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총괄센터인 KERIS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사실 작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한번 설치가 되면 보안 활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자금을 투입할 아주 절박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내년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번 구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구축된 것 자체가 보안상 취약하다고 나왔는데 계속 한 번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취약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번 구축되었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 없다고 하면 컨설팅은 왜 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아니고 자체 평가로는 보안 장치가 비교적 견고

한 쪽이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마는……

○조배숙 위원 그래요? 이 평가는 다르게 나왔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우리 국장님이 써 왔는데요, 최근에 보안 점수가 훨씬 올라갔다고, 구축하고 그것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안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축한 후에 그 실효성이 제대로 드러나기 전의 단계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8월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안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각별하게 관심을 쓰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간략하게 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4페이지에 보면, 교육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의 국제화 촉진이라고 해서 유학수지 개선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교육부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을 못 채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남 전북 강원……

그래서 이쪽 대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학생인데 어디냐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고 또 한류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도 중국에 가서 유치하는데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액수가 적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나가서 조기 유학을 하는데요. 거기 있는 학교들이 한국에 와서 엄청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다니고 있는 한국인 학생의 부모님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보고회도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국가에서 많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도 좀더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제일 필요한 것이 기숙사였는데 기숙사를 연기금으로 투자를 바꾼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부에서 스테디 인 코리아(Study in Korea)라는 비교적 잘 짜여진 프로젝트를 거의 다 성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유학생, 특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유학 박람회라든가 기타 비자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끝냈습니다.

곧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선을 보이겠습니다.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전환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올해 중반기까지만 해도 교육부에서 전환을 하면 3년 사이에 1대학 당 3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 첫 해는 6억, 두 번째 해에는 15억 원씩……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서 대학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교육부에서 내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편성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사업 계획을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사업이 있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2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이상, 보통학력 이상, 우수학력 이렇게 비율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저는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매년 할 필요는 없고 2, 3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 기초 학력을 평가해 보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학력부진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애들인지 파악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모든 학교를 다 해 보지 않고는 그냥 매년 매년의 경향성만 알 뿐이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더 상세히 평가를 해야만 국민이 좀더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되고 중요한 일인데요. 학교 단위, 시·군 단위, 시·도 단위로 학교폭력예방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이 중앙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시·도 단위 혹은 학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종의 체크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군현 위원 실제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역 단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2억,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억 8000, 한 2억 돈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저는 예산의 중복 투자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교육 자료개발 프로그램은 기본 예절이나 질서, 전통 예절, 민주시민 의식 쪽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인성지도 프로그램이고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하려는 자료는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 요령, 가해자 선도,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군현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 예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근원적인 사람 됨됨이를……

○이군현 위원 아는데요, 학교폭력 예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두 가지는 중복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군현 위원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려면, 현재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군현 위원 연차적으로 실제로 학교 내에 전문교사, 각 교과목 교사가 연수받아 가지고 하는 것 말고 그것은 거의 학교에 다 있지만, 실제 잘 아시지만 선진국에 가 보면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가 교과 수업 지도를 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은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부가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교사들 활동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상담전담교사를 확충하는 문제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보건교사를 정신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 연수를 통해서 함께 투입하고 사회복지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관여하는 삼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플러스는 되겠지만 보건교사하고

복지사하고 학교 폭력하고 연관하는 것은 저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학교 안의 사회적인 다이내믹스 속에서 이 문제가 표출되고 야기되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방송사이버교육 시스템하고 예산 문제를 제가 짚고 있기 때문에, 방송고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나요, 줄어 들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5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바로 그 연령대, 그 학령대의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 일반인들도 여기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수를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율할 생각입니다.

○이군현 위원 진정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목적이 그렇다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춰 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e-러닝을 평생교육 차원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된 노력을 하겠고요.

○이군현 위원 e-러닝하고 관련해서 컴퓨터하고 인터넷 통신 비용을 좀 대줘야 되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서 PC 구입하고 통신료를 보태 주는 작업하고, 방송강의를 제때 듣지 못하는 학습자를 위해서 테이프를 복사해서 제공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50%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까 제가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이 내년 5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5월까지의 활동 예산만 계상했고,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실업학교 체제 혁신인데, 실업학

교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본적인 체제 혁신을 하려면 내년 1억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턱도 아닌 예산 같은데요.

저도 지난번 교원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 교육 정책, 교문수석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이 뭐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순택 씨가 수석으로 있을 때 실업학교 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때 안이 나와 가지고, 실업학교 회장단들이 상당히 동의하는 안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업학교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달라, 또 그때 3%였던가로 기억하는데 동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실업학교 학생들에게 비율을 달라 등등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실업학교 체제 혁신을 한다고 하고 1억이면 새로운 연구 검토를 또다시 하겠다는 것인가요? 1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동일계 진학 3% 방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당시 마련됐던 실업학교의 특성화 계획하고 통합 고교로의 전환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군현 위원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실제 실업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상위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하고 어떻게 실업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까 하는 것들이 좀 핵심으로 들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1억 가지고 뭘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할 것이 많고 해서 장관님께 충분히 답변시간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교원 평가와 관련해서 그냥 짚기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홍보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원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보면 2005년도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홍보성 예산이라고 지적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하고 관련해서 광주 과기원도 마찬가지로 한국과학기술

원의 교수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는데 직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금년 초에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 유치원 교직원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두 가지만 대책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립 유치원이 적용대상 기관에서 임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연 적용 기관으로 전환을 꼭 하셔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원도 사립 초중고 교원이나 마찬가지로 공교육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 선생님 중에서 사학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 많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결국 사실 공적 연금이라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연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해서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절대로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금 챙겨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놓여촌 우수교 집중 육성인데, 우수교 육성이라는 것이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선발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위 위원장님께서 유감의 뜻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의견제출 기한이 법적으로 10월 2일인가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군현 위원 10월 2일에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실 입법부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내국세의

13% 되던 것을 19%로 증액하는 예산은 결국 세수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저는 다만 교원 수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원 처우와 개선된 것이 혹시라도 합쳐짐으로 해서 취약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통합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원 처우와 개선되는 문제들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알겠습니다. 그 개연성은 사실 적습니다만 그 경우에 대비해서 보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위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한나라당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료도 주지 않고 이랬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혁신위에 무슨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예산 싹 없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진흥기금에서 심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특정직이 계속 맡지 않도록 공정성을 반드시 기해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제교육정보화국에서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사연 잘 아실 것입니다. 500억 원 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합의될 때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분명히 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대충 정부의 안대로 한다면 서버가 1800개 정도 필요하고 운영 인력이 26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는 계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또 낭비할 수 있거든요. NEIS 합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느냐 하면 서버 수를 절대로 많이 하지 않겠다, 최소화하고 예산도 500억 원을 다시는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못 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저번에 결산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겹쳐서 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논문을 하나 봤는데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쭙 보겠습니다.

교육재정 일반에 대해서 국제 비교를 해 놓으신 자료를 봤어요. 공교육비 공공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03년도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까 OECD 평균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 92.7, 민간 7.2, 고등 공공 부문 78.6, 민간 21.4,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의 공공 부담률이 80.8, 민간 19.2로 OECD에 비해서 한 12% 정도 더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담률 23.3, 민간 76.7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 현황을 반영하는 재원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에 가입되어 있고 OECD가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국가의 모델이라고 가정한다면 OECD 국가의 재원구조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육 재정을 구성하는 데 하나의 방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백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고등교육 재정의 경우에 국가 공공예산 투입의 정도가 너무 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개선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또 하나 제가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교육비의 자본적 지출, 주로 시설비겠지요. OECD 평균을 보니까 초·중등 7.8, 고등 11.7로 대략 10% 선에서 소위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중등 같은 경우 15.8, 고등 27.8로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에게는 교수 학습비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의 상당 부분, 20% 가까운 돈들이 아직도 학교 짓는데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 대단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반영하는 통계 지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총 5개를 해 봤는데 부총리님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기는 하겠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1인당 교육비는 매우 낮다는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대략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6, 70% 정도, 달러로 계산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3.15불인데 OECD는 4.47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6불인데 OECD는 11불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학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도 나왔다고 하지만 역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될 수 있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인데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 이것은 저희들의 수입 구조, 재정 구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교육비의 81.8%, 지방정부가 18.2%를 부담하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5 대 5, 또는 6 대 4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8 대 2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들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방향으로 논의되고 더욱더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고등교육에 대한 자원배분 구조가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GDP 대비로 보니까 OECD 같은 경우에는 고등이 1.2인데 저희는 0.7, 중앙정부 예산 대비로 보니까 OECD가 2.9인데 저희가 2.7로 전체 GDP 대비로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비 재정 지원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책을 몇 개 제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GDP 대비 1%로 확보하겠다는 공약 사항이 있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저희가 0.7%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 예를 들면 재원을 찾아낸다는지 재원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실상 지금 기존의 틀 속에서는 GDP 대비 1%를 성취하는 것은 난망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직 내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토의하고 있으시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부총리께서 국회 교육위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달성하셔야 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유념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다음에 고등교육 재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혹시 전체 캐퍼를 늘리지 않고 지방교육 재정에서 옮기거나 이런 것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럴 수는 없지요.

○백원우 위원 예,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 사립대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이제는 좀더 정밀하게 검토될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에 있다, 건물을 지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늘려 주는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어느 정도 지원을 늘려 나가야 될 단계가 왔지 않은가 이런 문제 제기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대학 구조개혁과 맞물려서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의 등록금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에 비해서 한 40% 정도 비싸고…… 차액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이나 사회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다 지원하기보다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요즘 바우처제도라는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실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장 절박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보면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의하면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어느 돈을 갖다가 사립학교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선언적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교육 재정은 분명히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들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빼서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나갑니다.

○백원우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분명히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아닙니다.

○백원우 위원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아닙니다.

○백원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국립학교 지원 재원의 일부를 잘라서 사립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정의 결합되는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서 법정전입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이 대략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시·도별로는 법인전출금과 연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돈을 더 많이 낸다면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형태의 전환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추기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백원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립학교의 육성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서, 새로운 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 규정들이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화 쪽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최근에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논쟁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명심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다음에 교육재정 일반으로 보아서 유아·특수·영재·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선언적 규정만 있고 거의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 교육지원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은 0.1%, 특수교육 및 교육복지는 0.2%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효성 있는 법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경우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백원우 위원 많이 는 것이 아직도 이 정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는 것이 전부 합해도 1%가 못 됩니다. 열악한 상황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리고 아까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금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계 곤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되어야 하는데 등록금이 다 똑같아서 어려운 학생들도 등록금을 내는데 그 등록금이 성적 우수자에게 간다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성적 우수자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거두어서 부유한 학생에게 주는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가계 곤란자가 많으면 그중에 성적순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기준 자체를 성적 우수자에서 생계 곤란자로 분명히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저희들이 성적 우수자에 역점을 두었던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부터는 확연하게 변화 양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원우 위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찢끔찢끔 하면 국민들이 피부로 못 느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이차보전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금감위나 재경부와의 이야기를 하셔서, 도리어 취업을 못하고 실업자가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이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공계 쪽은 무이자 쪽으로 꽤 전환이 되었고 이 문제는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이 논문에서는 우리 교육재정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이러이러한 필요성들이 있어서 예산을 그만큼 짜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예산처나 재경부나 다른 부처와의 소위 예산 협상 줄다리기 과정 속에서 교육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보아서도 상당히 비교육적인 방침이다……

대략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충 현황은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건의와 다른 장관님들에 대한 설득이 있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리고 지방에 대한 책임을 좀더 확실하게 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어 있는 특수·유아·영재·평생교육에 대한 확실한 재원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소화해 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교육재원에 대한 총액이 증액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GDP 몇% 이런 공약을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항상 교육 수요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다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런 구조들을, 혁신적으로 어떤 하나를 확 잘라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자꾸 높아지는데 계속 쫓아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항상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과감한 증액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부총리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문제 부분은 대단히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업무 보고하실 때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33명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들까지 포함해서 33명이고 저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통계 수치라고 봅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45~46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교육부의 약속이 언론에 보

도되면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급의 아이들은 45명인데 33명이라고 보도해 보셔 봐야 국민의 불신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교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국가가 계속해서 공공기금이나 민간 재원에 의한 SOC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속도를 내서 내년부터는, 국감 답변에 보시면 한정된 지역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히 경기도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지역에는 시험 적용이라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입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고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 모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기한 몇 가지 사학 진흥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불합리한 재정 지원 구조들이 있다면 혁파하시고 제도화하셔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 委員 부산 사상 출신의 권철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교육 혁명을 통한 창의력 증대와 경쟁력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 일이라고들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 혁명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또 백년대계라고 하면서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5년 동안 장관께서 일곱 번째 바뀌셨습니다. 교육 백년대계와 교육부 수장의 빈번한 교체가 걸맞은 것인지 답답합니다.

제가 교육부장관에게 특별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침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싫

은 소리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충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님이 우리에게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심각하게 논쟁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팀이 해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육부의 미래는 없다, 이제 거의 절망적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병영 부총리에 대한 세간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깊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단에서 쌓으신 명성이나 갖고 계시는 지적 능력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바르게,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침해당하지 말고 꼭 소신을 살려서 이번 기회에 한국 교육 백년대계의 확실한 기초를 쌓아 주십사 하는 주변의 부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느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權哲賢 委員 이런 말은 뭐합니다마는 장관직은 짧고 인생은 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 오신 명성이나 여러 평가에 걸맞게 나머지 장관직을 잘 수행하셔서 우리들 머리에 오래 남는 교육부총리로서 자리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명심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조그마한 것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캄보디아의 프놈펜 왕립대학 한글강좌 교수 영입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기억합니다.

○權哲賢 委員 그때 한국에 있는 한글 교수를 초빙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북한의 한글 교수를 데려오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 제가 그 말을 전하면서 프놈펜 왕립대학은 프놈펜의 지배적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거기에서 한글 강좌를 모처럼 만들어서 실시하는데 북한 쪽 교수가 가면 되겠느냐, 현지 대사관하고 연락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교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분명하게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교육부의 어떤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權哲賢 委員 그다음에 고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의 현장을 많이 다녀 보고 또 우리 여야 위원들이 집안 환인 등을 돌아다녀 보면서 공통으로 느끼고 확인한 것은 고구려사, 우리의 상고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과 역사의 뿌리 찾기가 나라 바로 세우기 이상의 큰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고대사 연구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식민 사관 같은 것에 둘러싸여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단이 중국에 다녀오고 나서 황우여 교육위원장께서 직접 기자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대사에 관한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개방하고,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개방한 사람들에게 연구비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기억합니다.

○權哲賢 委員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든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데 강단 사학자들과 견해를 상당히 달리하는 재야 사학자들의 견해도 이제는 들어야 되겠다…… 교육부장관께서 저한테 보낸 서면답변에 보면 재야 사학자들의 견해도 수용하고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재야 사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개방하고 지원하는 데 구체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야 사학자들을 설득해서 견해가 다른 것을 가지고 고함만 지르고 싸우지만 말고 교육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연구의 결과를 축적하고 또 강단 사학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고·검토·연구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노력하자고 설득해서 이번에 사단법인 상고사학회를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에 60억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분들과 견해를 상당히 달리하고 또 저희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만든 조직이 아니라 조금 소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이런 조직들에게 행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재야 사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알리는 데는 열심입니다마는 어떤 연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계획서를 마련하고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이는 노력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연구계획서 가지고는 돈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연구 활동에 대한 공적인 자금 지원은 대개의 경우에, 학진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어떤 공식적인 경합 과정을 통해서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입각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돈을 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돕기가 훨씬 평이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哲賢 委員 오히려 부총리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그런 일에 익숙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냐고 자꾸만 야단치고, 그래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교육부총리께서 교육부에 그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료르 어떤 양식에 의해서 내도록 죽 해 주시면 그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배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노력을 하

했습니다.

○**權哲賢 委員** 아울러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역사 왜곡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조배숙 위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왜곡 교과서 내용 분석이나 오류 시정 작업 같은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때는 예산이 좀 늘어나다가 가라앉으면 예산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의 많은 교과서들이 검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를 잘 선택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이 1년 임시 계약직입니다. 1년 임시 계약직을 가지고 누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축적하고 열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임시 계약직의 처우를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봉급도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가, 특히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40% 정도 삭감되어 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고구려사 논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장관께서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산과 서울은 33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부담을 해 왔습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이 교원 인건비를 부담해 온 것을 보면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년 말로 모든 기간이 끝나고 재정비를 하면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똑같이 10%씩 부담하도록 잡고 나머지 광역시가 5%, 경기도가 3.6%, 이렇게 잡아 놨는데, 서울과 부산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보다 재정·경제력이 월등한 경기도보다 부산을 5%나 더 높게 잡은 것은 참으로 어안이 병병합니다.

2004년도의 경우 부산시 교원 인건비 부담액은

979억입니다.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인건비 총 부담액이 506억밖에 안 됩니다. 5개 광역시 총 부담액 506억보다 473억이나 더 부담해 왔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재정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부산보다 예산 규모가 세 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원 수나 학생 수가 부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부산의 69.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경기도보다 훨씬 더 내라…… 부산이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일일이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33년간 부담한 것이 8942억인데 최근 5년간 부담한 것이 382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이 갈수록 부담이 팍팍 늘어나가고 최근 5년 부담한 것이 지난 28년 부담한 것의 약 42%나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어디가 더 재정 능력이 뛰어난지 실정을 봐 주세요.

그래서 부산도 다른 광역시나 경기도와 같은 수준에서 교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안은 부담 금액을 비율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서울이 6.1, 부산과 기타 광역시 경기도가 4.4, 나머지 도는 3.6으로 하자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서울과 부산을 똑같은 수준에서 하게 되면 부산시민의 불복종 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차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자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부 나름대로의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대안을 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은 저희들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權哲賢 委員** 이것은 저희 위원들 간에도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기가 차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예산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먼저 다루고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는 순서가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주시고 그 대안에 따라서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노력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마찬가지로 법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이 정해져야 되는데 못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영재학교 같은 것이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해 보니 굉장히 선풍적 인기와 굉장한 실력자들, 천재들이 모여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의 지위 문제나 교육비 지원 문제나 전공별 심화 학습을 위한 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 문제나 우수교원 확충 문제 같은 것을 이번에 바꾸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영재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법을 개정하면 또 예산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에 대해서 예산 증가되는 것이 얼마인지 차관님 아십니까? 한 100억……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구중심 대학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과학기술부가 했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과학기술부가 지원 내역을 발표했을 때 부산대와 전북대의 2005년도 예산을 각각 50억씩으로 배정했는데 뒤에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되고 계획이 바뀌면서 원래 약속한 액수가 지원 못 되고 아마 사업대상 수도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대학들은 당초의 발표에 따라서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준비를 죽 해 왔습니

다.

공고한 대로 부산대와 전북대의 지원 예산을 50억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1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 연구중심 대학육성 사업 예산을 150억 원 정도로 증액해서 원래 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것은 부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지 말고 약속한 대로 지켜 주면서 다른 데에도 꼭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조금 증액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대하고 추진해 오고 계획을 짜 왔던 대학로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후년 정도 가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급하게 연락을 주실 것은 급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임위 초기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법안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어서, 우리 상임위가 현재 소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지만 동시에

제출됨으로 인해 사실 저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지만 뭐 이렇다 할 속 시원한 결론도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된 시간 안에 우리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주 전에 황우여 위원장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가 보고 그 나라의 잠재적 가능성, 성장하고 있는 어떤 기운들을 느끼고 왔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차세대 주인공, 주자들이 한국통이었으면 좋겠다, 한국의 개발 모델이나 한국의 주요 국가 정책들을 그들이 배워 가고 모방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터에, 우리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복기왕 위원 2004년도에 70명을 했고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41개국에 71명, 총 2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보통 정부 초청 장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배우고 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알기에는 아마 경우마다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위 취득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꽤 오래 걸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게 걸리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교육진흥원장님께 자세히 한번 여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아닙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만 정리를 해 드리면, 학사과정은 좀 빠르고 석·박사 과정을 한 6~7년 정도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중심적인 대학에서 공부하고, 우리 정부의 비용으로 수혜를 받은 그들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가르친다면 향후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관료로든지 혹은 정치인으로든지 학

계든지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 씨를 체계적으로 많이 뿌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국가들 경우에 좀더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체재 기간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잠시 한국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그들의 인맥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면 해서 그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복기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 차세대 지도자들 중 친한파랄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키울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 이상 큰 성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터디 인 코리아(Study in Korea)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치밀하게 논의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쓸 때 중국이라든가 일본 등등 큰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마는 못지않게 동남아 여러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키우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번 예산안부터도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께서 오늘 공적인 일로 못 나오셨는데 서울대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했습니다.

교육부가 94년도와 200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01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 2억 원도 승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고 언제 이전될지 불분명하다 이러한다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전에 국정감사에서 한 번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뜻이 없거나 서울대학교가 우선순위를 뒷전으로 돌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 계획하고 그 문제가 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되는, 미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완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복기왕 위원**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15억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랬습니다. 이번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도시 계획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풀릴 것 같은 기미가 거의 확실해지고 서울대학교 쪽에서도 열심히 이 문제에 관심을 써서 저희가 좀 결단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질의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복기왕 위원** 중국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고구려연구재단이 정부의 공식 기구로 되지 않은 이유가 외교적인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얼마 전 상임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고구려연구재단을 법제화하려는 일부 의원님들의 움직임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부총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 입장은 고구려연구재단이 가능하면 더 견고한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이 제정되는 데는 저희들이 전혀 이의가 없고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복기왕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작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사실상 역사 왜곡을 위한 연구 비용이 2004년도에는 5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도 대폭 확대가 되어야 될 텐데, 60억이면 전체 경상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2004년도하고 똑같이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학술진흥재단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내부적으로 더 책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만 특화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복기왕 위원** 자칫 잘못 주면 다른 운영비, 경상비로 유용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만 특화시켜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학진 연구비는 연구 진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전용될 수가 없습니다.

○**복기왕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정신문화연구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지금의 고구려연구재단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독립기념관 이런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공동의 연구도 하고 대응 논리도 개발해야 할 텐데 이런 각각 기관들의 한국사 연구 사업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서로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칫 중복 연구나 혹은 연구의 비효율성들 때문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에 대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실상 고구려연구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마음을 껴 썼습니다. 세 기관의 수장께서 만나셔서 저희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함께 토의했고, 아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는 통합 네트워크는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혹은 역할 분담 체계 형성 과정에서 적정한 정도의 통합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연관된 세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쓰고 가능하면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리고 하나는 작년, 제작년에 문제가 됐던 건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제하 단체나 인물 연구에 관한, 친일인명사전 관련 했던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복기왕 위원** 2002년도에는 2억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올해는 아무런 반영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올해 이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민들이 대략 7억 6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는데 국민들의 이런 요구, 이런 뜻에 발맞추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일단 이 문제를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아시겠습니까마는 행자부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운영 경비로 내년엔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반민족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일제하 단체나 인물 연구 사업도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련 예산도 이것을 주도하는,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조직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복기왕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위에서 지원을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달 위원 박창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총리께서 조금 지난날을 더듬어 보시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박창달 위원 지금 이 자리에 16대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은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하고 저하고, 현재 이 자리에 두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에서도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16대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자들 한번 들어 보세요.

당시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에도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물론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 심사를 받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 대한민국 국회 의정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지금 장관을 두 번 하셨는데, 1996년과 1997년 36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실 때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회 예산심의를 받은 기억이 남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창달 위원 만약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럴 경우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달 위원 많은 혼란이 야기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재원의 확보가 문제입니다만 재원 조달이 가능하면 큰 혼란은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의결되는 교부금의 내용에 따라 예산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달 위원 부총리께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교육 위원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법안 심의 시한이 촉박하게 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예산부수 법안들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는 일이 드물지만 아마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달 위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법률안 주요 골자 중의 하나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시 지역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박창달 위원 2002년도부터 전격 실시된 중학

교 의무교육은 시작부터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박창달 위원 당시에 공립학교 교원 봉급과 관련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주체가 국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했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의 갈등이 굉장히 큼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박창달 위원 사실 공립중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가 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가, 사실 교사의 월급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설왕설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는 지난 16대 국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인봉 전 의원 대표발의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이미 2000년 7월 25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취임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달 위원 2000년 당시 교육부는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실시하자는 정인봉 의원의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뒤에 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지금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부총리께서 당시의 회의록과 교육부 답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12월 5일 제215회 정기국회 제6차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조차도 모두 부족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정인봉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혹시 차관, 기억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정확하게……

○박창달 위원 그때는 분명히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2000년 당시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창달 위원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어 교육부는 깜짝 놀랄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1년 1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수업료, 입학금 등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맞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달 위원 2000년 12월 5일에는 돈이 없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 못한다고 하였다가 2001년 1월 1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말 한마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2000년 12월 5일 당시 이돈희 장관과 김상권 차관, 교육부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2000년 12월 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를 주장하는 정인봉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서 당시 김상권 차관은 1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무작정 의무교육 확장을 해 가지고 공교육 내실화 사업의 재원을 그쪽으로 돌리는 등 유동적인 상황에서 언제 몇 년도로 못 막는 것은 법 규정상 기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당시에 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당시 교육부와 김상권 차관의 답변은 한마디로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는 국가 교육재정 형편상 절대 불가 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답변했습니다.

1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몇 년도로 못 막는 것은 법 규정상 기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그것을 번복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재원도 없던 1조 4000억 원이 생기고 또 법 규정상 기속적인 문제도 일시에 해결되는 것인지 교육 위원 두 번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법안이 국회 통과 시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듣고 있습니다.

○박창달 위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시하기 전에 일선 광역자치단체장과 재정 분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실상 법안이 늦게 제출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있었고 또 서울시하고 부산시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숙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선행되다 보니까 법률안 제출이 꽤 늦어졌습니다. 아직 해결까지는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진지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창달 위원 소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을 마련했는데 당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규정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2001년에 합의를 했지요. 그것은 2005년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니까 2004년 말을 시점으로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창달 위원 결국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인해서 생색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내고 뒤처리는 참여정부에서 하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일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웃음)

○박창달 위원 좋습니다.

정인봉 전 의원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가 국가재정상 힘들다고 하면서 실시 시기를 좀 늦추는 것도 타당하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불과 한 달도 안 돼 대통령의 말 한마디 지시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점 둘째, 1조 4000억이라는 교육재정이 필요하며 반대했던 교육부가 정작 교육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3550억이라고 수정한 점 셋째,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김대중 대통령 퇴임과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기 실시를 전격 발표한 점 넷째,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전 국민 시혜적 교육정책을 야당 의원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정략적 판단 아래 대통령 퇴임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한 점 다섯째,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 문제 부담에 대해서 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못 박고 한시규정으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교육부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고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 와서 말한 것과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장관께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박창달 위원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박창달 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들을 보면, 사실 산학협력 사업은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정보화지원사업도 삭감이 되어 있고 대학 구조개혁 문제도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박창달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여섯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빠른 시일 안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재정이나 연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흔히 재정 경제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라든가 운영이 되는 측면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이나 사회정책 파트와 관련한 재정 예산 편성과 연기금의 운용 이런 균형이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재정편성 계획 속에서, 그리고 연기금의 운용 과정 속에서 교육과 사회정책 파트의 요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높은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힘을 쏟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편성된 교육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양적인 문제이고 사실 질적인 비중으로 들어가면 스스로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질적인 균형 부분들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꾸 교육이나 사회정책 예산을 축소 지향적으로……

기획예산처 운영에 맞서서 좀더 질적인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면 저희도 뒤따라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강한테 올해 1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2008년도에 40개 지역으로 규모나 숫자를 확대할 것 같고 2006년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나가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는데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미리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미 기초단체와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자체와의 대응투자들이 늘어 나갈 텐데 연계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준비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우여 위원장, 이주호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데 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일단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을 교육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 사업의 주체 자체도 지방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의 큰 예산 운용계획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부 본예산에 이것을 책정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그쪽으로 힘을 쏟는 것이……

○이인영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재정 지원이 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실 텐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인영 위원 교육복지 포럼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비 중심에서 기초시설투자 지원 쪽으로 점차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추세로 볼 때는 잘 안 맞고,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거나 유휴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기초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특기 적성이나 도서관 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일정한 시설투자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을 잘 활용

해야 되는데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고 유휴공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프로그램 지원센터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복지 지원뱅크 같은 것을 통해서…… 시설만 해 놓는다고 해서, 또 프로그램만 제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 자재, 간식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것들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사업예산의 일부를 사실상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시설 확보에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겠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음 평생교육 관련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OECD 대비해서 우리 교육예산 중에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비교가 안 됩니다.

○이인영 위원 저희는 1% 미만인데 일본 6%, 미국 10%인데 직업교육까지 하면 23%대이고 영국이 29%, 호주는 46% 이상 나오는데 어쨌든 다 아시는 대로 지식기반 사회를 고려하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소외계층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문제와 관련하더라도 이것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백번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아울러서 국가가 최소한의 예산 지원은 계속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라든가 평생학습도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이양시키고 올해 본부에서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원 시스템이나 연계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지방으로 이양해 놓으면 굉장히 부실화될 수 있고 또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확산이 부실화되거나 축소되거나 그 속도가 감퇴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정 정도의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교육청과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올해 급속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인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어야 이 사업이 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교육청이 자연스럽게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평생학습 쪽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고 지원도 함께 해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신경을 쓰느라고 국고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교육부 차원에서 더 쥐고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다고 모두 간섭하고 일일이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점하면서 확대하고 이양해 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이 같은 맥락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학력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비가 굉장히 적은 것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서면질의로 했었는데 사실 4억 8000만 원 수준 가지고 무학력층 내지는 저학력층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학업 열기를 넘어서 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교육을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젊은 연령대의 경우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을수록, 성인 중에 초등학교 교육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인구가 2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기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어떤 예산에 스페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학력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대정부질문 때 퇴직수당 부담금을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학연금관리공단하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쭙어봤는데 이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가 부담 퇴직수당이 굉장한 액수로 편성되고 있는데 1610억 정도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원래는 사학법인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국가 차원에서 계속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가피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대책을 세우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터놓고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책토론을 하지 않았습시다. 전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격상 사학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정책토론을 해서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류충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이 앞에서는 딱 멈추셨다 말입니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화방안’에서 멈추셨는데 그 지적에도 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있어서 국가 부담의 범정화는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 없어서 매년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반복 편성되는 것은 크게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부총리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저도 지방이전 사업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실 실업계 고교가 현재 지역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 지금 급격히 감소하는 형편인데 반면 졸업생들의 진학이나 취직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업계 고교의 목적형 고교로서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고 실업계고교의 재정 지원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지방교육청으로 실업계고교 지원사업이 이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업교육 기피 현상으로 투자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대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아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학생들이 취직은 잘 되는데 다만 군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국가로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가르므로 이 부분은 무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당장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별

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수능시험 당일 선린인터넷고등학교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대개 직업탐구……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오는 데인데 그 학교가 실업계 교육의 특성화에 굉장히 좋은 전범이 되고 있어서 겸사겸사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단순한 직업교육기관이라기보다 특성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 인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명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특성화 쪽하고 통합고교 쪽이 괜찮게 잘 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고 동일계 진학의 길을 강하게 터놓았기 때문에 그쪽에 출구가 좀 생길 것 같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전부터는 교육혁신위원회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대통령님께 보고가 되고 방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 교육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합적인 혁신안이 나오게 되고 달라지는 모습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직업 교육의 기능이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교육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혹은 시·도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도 항상 강조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강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이지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평가에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넣고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시·도교육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안이 나와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게 되면 확실히 실업 교육은 내년부터는 좀 서광을 받을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때는 예산을 따로…… 추경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도 지방이전 사업으로 하다 보니 축소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데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전북이나 강원도 같은 데는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결식아동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내려 보내는 것보다는 차등을 주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어느 정도로 차등 지급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특별교부금은 그냥 교부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어디에 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지방교육청의 로비에 의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폐지할 수 없으면 줄이고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서……한 1000억 정도 축소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돈을 이런 부분에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교육부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미 내년에는 교부금이 4%로 많이 줄어듭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정책사업비로도 쓰고 시설비로도 쓰고 요긴한 방도를 찾아서 쓰는데 지역에 따라서 균형되지 않게 일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균형을 찾고 미진한 쪽을 메우는 쪽으로……

○최순영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국감 때도 보면 사실 로비에 의해서 쓰여지는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특별교부금의 30% 정도를 시설비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시·도교육청의 사업 우선순위로 높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냥 로비에 의해서 중앙에서 어디에 얼마 식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최순영 위원 중앙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 지역에 얼마씩 내려 보내면 지역에서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결식 아동이나 어려운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3, 40%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퍼센티지를 좀 높이거나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백번 유념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현재 전국에 12개 정도의 성인 장애인 야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야학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의 지원 방안을 요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들이 사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장애인 야학기관은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돕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번 예산에도 보면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을 모델사업으로 몇 곳을 하기 위해서 24억 8100만 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성인 교육에 있어 중요하고, 성인 교육의 하나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장애인 예산으로 앞으로 특별하게 책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라도 좀 이쪽으로 돌려서 우선 2005년도에는……

주로 보면 성인 문예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산을 보면 주로 행사성 예산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동안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2800만 원의 예산을 30년간 이례적으로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는 행사성이 굉장히 강한 예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산적으로 쓴다면, 제가 보기에 예산을 좀더 책정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으로 돌린다면 2005년도에는 임시로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을 때 성인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인 장애인 야학 실태 조사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딱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지만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돌려서라도 임시로 그렇게 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에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좀 살펴 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년이 을사조약 100년이요, 한일협정 40년이요, 광복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에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이 재연될 위험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예산은 책정되었는지……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한일 공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내년 5월에 사업을 끝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엮어온 일종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역사 왜곡에 대한 반대 노력, 학문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 같고요. VANK라든가 민간단체에서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일본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검인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곡이 줄어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의 결과에 저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빨리 분석해서 계속적인 시정요구 노력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뒷받침이 되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분석 전문팀을 구성해서 계속 가동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외교활동 사절도 마련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못 다 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진수희입니다.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교육재정 구조와 관련하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우리 교육재정 구조의 후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유아 교육을 포함해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 비중은 86%고, 투자증가율은 고등 교육이 7% 정도, 평생 교육이 1% 정도 되는데요, 평생 교육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후진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전체 예산 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데요.

아까 백원우 위원님이 OECD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공공 부담과 민간 부담 비율의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대학 교육은 공공 부담을 좀 높이고, 초·중등 교육은 민간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배분 구조를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중·고등학교의 경우 재정상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들을 자립형으로 유도해 가면서 그쪽은 민간 부담을 높이고, 고등 교육은 공공 부담을 높이고, 평생 교육의 재원은 좀 확보하는 식으로 가는 어떤 개선의 여지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쯤이면 이런 재정 구조의 후진성을 면하는 모멘텀을 맞이하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전망이나 예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격적인 지식기반 사회가 전개되면 고등 교육이나 평생교육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등 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폭적으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공공 부담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아시듯이 현실적으로 일정한 실링은 대개 정해 지는데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카테고리도 정해지고 잔여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움츠려 뛰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기존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대대적인 플랜이 생기기 전에는 큰 변화는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재정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근본적인 교육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서 말씀드렸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옳은 말씀입니다.

○진수희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절차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에 관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절차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에 대해 국회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설사 이것이 아무리 뜻이 좋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국회 입법권·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관해서 교육부와 여당과 소위 당정 협의는 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중

요한 사안에 관해서 당정 협의는 늘 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논의
를 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어떻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현실적
으로 안고 있는 한계와 앞으로 일의 처리 방향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제출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제가 수차례 유감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뭔가 하면 지방
교육제정교부금법개정법률안은 사실 다른 법률안
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밀접한 관
계에 있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할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대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같이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을 드립니다.

○진수희 위원 아니, 예산 부수법안이지만 법안
통과가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
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
고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도 만약 이 부
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
게 되면 발목잡기를 한다고 그러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말
씀 안 드렸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 사업
과 관련해서 구관서 실장님은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
가사업이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와 같이 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항목은 그대로 편성되
고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요. 제가 문제를 지적하
면서 학교 현장, 아니면 최소한 시·도교육청에
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디자인을 바꾸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아예
하시지 말든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하시네요. 학업성취도 조사 방식이
나 이런 것의 디자인을 안 바꾸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

○진수희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 하나 더 늘리는 것 이외

에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을 저는 실제 다니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관점의 차
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고1의 경우 1%를 3%로 올린 것
도 있고요.

또 기존의 방식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말씀
을 하시는데……

○진수희 위원 아니,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없
고가 아니고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보
고서가 창고에서 사장되고 있는 꼴을 보고 이것
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데 전
국 규모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과목별 성취도
추이를 분명히 알려 주지요. 그리고 대도시라든
가 중소도시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지역의 차이도
보여주기 때문에—지역과 학교별 차이가 분명하
게 드러나지 못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이것 자
체로서……

○진수희 위원 아니, 그 결과를 정책에 전혀 반
영을 안 하고 있던데요. 이 내용 자체를 인지하
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
래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교육 과
정을 편성하는 데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
후 평가 결과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 표집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진수희 위원 표집 규모를 확대하면 이것을 공
개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공개 문
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직원체라
든가 시·도교육청이라든가 학교와 사회적인 대
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되는 선에서, 또 법적
인 제도적인 틀도 만들고 해서 공개하지 무작정
원자료를 공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개하는 것
도 수준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진수희 위원 공개했을 때의 파장을 우려하시
는데 공개를 해서 그 공개 결과를 가지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정책을 강구해서 집
행한다면 설사 공개 직후 일정한 기간 동안 파동
이 있다 하더라도 곧 바로잡힐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런 문제도 있지요. 어떤 교직원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반발이 있다 없다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그것 못지않게 사실 지역별·학교별 과열 경쟁 유발이라든가 사교육비 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꽤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장관님, 그 결과를 가지고 유난히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강구하면 과열 경쟁은 잠시 있을지 몰라도 금방 잡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교육부만 갖고 있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것이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혁신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는데, 국감 첫날 제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보면 17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혁신위 활동이라든지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 기능을 못할 바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마시든가, 또 부득이 예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짚으셔야 되지 않아요?

제가 그날 지적한 내용 중에 혁신위에서 외부 용역을 주는 과제들에 관해서 지적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기억합니다.

○**진수희 위원** 제가 그 용역과제 보고서를 죽 보았더니 심지어는 2000만 원짜리 용역과제 보고서가 한 20쪽 되는데, 물론 양이 질을 담보한다고 꼭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글씨 크기로 된 20쪽짜리가 2000만 원짜리 보고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부 예산이 쓰인 결과물에 관해서 타당도도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혁신위가 성역입니까? 용역과제 아무렇게나 주고 형편없는 결과물 받고, 다음에 같은 식으로 과제 주고 예산 쓰고…… 이것 이대로 두어도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혁신위는 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와 같이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고요.

○**진수희 위원** 그러면 혁신위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아직 챙겨보지 않아서 저희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제 차원에서 한번 요구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비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다음,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중학교 교과서 개정본이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어느 때보다도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키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올해보다도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아까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내용 중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이 내년 5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진수희 위원** 그 말씀은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새로운 사업을 계속 개발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한일 간에 거의 제도화된 틀을 갖고 몇 년을 공동 연구해서 제법 사업 성과를 내고 한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성안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진수희 위원** 아니, 꼭 그런 식의 사업은 아니더라도 역사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서 지속사업으로 끌고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정신문화연구원을 통해서 한국 역사 알리기 운동을 계속하고, 그 활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역사 왜곡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공유하고 계시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시 좀 치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10억 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진수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여성부의 보육개발원과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여성부 쪽은 일할 사람도 뽑아 놓고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부하고 교육부가 각각 10억 원씩 출연해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 쪽에서는 아무 것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여성부 쪽은 보육, 저희들은 유아 교육 쪽으로 10억씩 계상되어 있고 함께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일단은 조정해서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여성부에서는 단독으로 연구기관을 마련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은 반대고, 또 성사되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의 바른 방향으로, 바른 궤도로 다시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교육 행정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을 단시일 내 일원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총리께서 여성부 쪽과 협의를 잘 하셔서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잘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만 5세아 전체 아동 중 유치원에 취원하는 아동 수가 반 정도인 47%, 그다음에 보육시설로 가는 아이들과 아예 보육시설에도 안 들어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반반씩 됩니다.

취학 직전 그러니까 만 5세아의 경우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한 27%, 꽤 많은 비율이 가는데 유치원 운영시간이 보육시설에 비해서 짧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유치원 종일반을 더 늘려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05년도 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 명목으로 51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의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철을 좀 시키지 그러셨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한계상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어도 200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패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아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서면질의 한 가지를 더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 기금 확보 방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책임준비금에 관해서 제가 국감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2005년 예산에서도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아대상 학원 지원하는 문제를 국감 때 질의했다가 지금 유치원 쪽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은 이번에 정문연 원장님으로 새로 오신 윤덕홍 전 부총리가 작년 국회의원회의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차원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현실로 보아 미술학원이라든지 그런 학원들이 보육시설의 기능을 일정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었고요.

이것이 시설에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우처 방식으로 하면 학부모나 아동한테 지원하는 것이니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집 가까이에 없고 미술학원은 집 가까이에 있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도 시행령 마련되면 한번 보자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니까 2005년 예산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안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게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정이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습시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오늘 질의를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중요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준비해 온 질의는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예산이 국·공립, 사립도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1월 7일인가요? 사학재단연합이 주도해서 한 것인데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공립 교장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분들도 국가의 봉급을 받고 있고 신분도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주의 주장하는 것과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특히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 직접 가서 연설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이 무엇인지요? 분명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당사자들이고 당해 학교를 이끌고 있는 당해 학교의 교육 수장인 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의 주장의 시시비비가 아니고 과연 그런 신분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의 수장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참여한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책이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부가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님께 자제 요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참여한 숫자는 아주 극소수였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친 개입을 조금 삼갔다고 하면 삼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고 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들께 분명하고 엄정하게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시적인 조치는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부총리께서 참여한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썄요, 저희가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그 현장에 저희 교육부에서 꽤 많이 나가서 집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얼마 전에 술에 취한 경관이 자기 직장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또 실제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매우 취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마는, 견주어 봤을 때 이번 11월 7일 국·공립 교장들이 그런 해당 집회에 참여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몇 명 안 되었다,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이런 것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

제입니까? 저는 장관님의 분명한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수가 적었다든가 그런 것 가지고 그분들의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위원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 행위 자체가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불법성을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예컨대 경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 현재 법률하에서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논란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만약 향후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신분에 어긋난 불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감성적인 해석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규정하고 있고, 또 여타 공공행정 부분과의 문제를 견주어 봤을 때도 분명히 신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조처한 것은 어떤 업무수행 상의 행정적인 착오나 미스가 있을 때 법률적 소추에 해당되지 않아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경우하고는 분명히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직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아니, 1년에 살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살인죄를 분명히 엄중시키고, 또 살인을 예비하거나 교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숫자의 문제나 감성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교육부의 대책 자체가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11월 7일 이후 이것을 처리한 것도 감성적 차원의 처리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었고 대책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게 되풀이되면, 지금 부총리님 말씀은 단단히 해 냈기 때문에 안 할 것이지 아닙니까? 하여튼 사후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공립 교장 중 여기에 참여한 분들, 혹은 교장이 아니더라도 교사 중에 참여한 분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최소한 누가 참여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 저는 지금이라도 감성적인 해석이 아니고 법률적 해석에 착수해서 응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법률적인 해석 여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법적인 해석을 의뢰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감성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 쟁점으로 굉장히 불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재성 위원 아직까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법률적인 해석도 안 하고 ‘주의조치하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게 감각에 의존하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어떤 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행위나 규모는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부 문제인데 거기에 100명이 참여했는지 1000명이 참여했는지 교육부에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으면, 대응 수위라든가 향후 재발

방지책을 함에 있어서 정책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규모나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주 구체적인 파악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우리 교육부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대체적인 파악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누구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는 저희들이 경찰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관계기관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다 채증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처벌 여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최소한 실제적 상황과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법률적 검토와, 그다음에 참여 규모, 참여한 분들의 집회 장소에서의 행위들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파악 이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서지 않고, 또 대통령이나 장관의 영이 서지 않는데…… 집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못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빠른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과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립학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80% 이상이 폐교를 결의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진짜 80% 이상이 폐교 결의를 했는지, 했다면 과정상에 결격 사유는 없었는지, 과정의 결격이 있었는데 폐교한다고 집단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는지를 분명히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을 왜 짭니까? 예산을 주어야 될 대상 학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교들이 폐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폐교를 한다면, 내년에 폐교하면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치상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 법률 중 자연적인 학생 정원 감축으로 인

해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결의했을 때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얼마까지지요? 소위 말해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폐교를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3분의 2 이상 이사진들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본인들도 최소한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전화 걸어서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사회를 연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폐교를 결의했는지의 여부와, 결의했다면 이사회 회의록 첨부를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반복되지만 폐교를 결의했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틀이나 예산 내역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반복됩니다마는 당해 학교들이 폐교를 결의했는지 여부와, 결의했다면 그것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수요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폐교가 불가합니다. 이들 학교가 선언적인 엄포를 한 것이지 이사회에서 폐교를 결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겨냥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최재성 위원 저도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강대도 얘기했지요? 거기는 이사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사회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서강대 안 했나요? 다른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이사회 안 하고 이사장 개인이 발표한 것입니까?

만약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발언이고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파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사회 결의를 한 학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이고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분명히 법률적 체계가 있는데 전혀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위 학교에서 실제로 했는지, 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그 사람들이 대충 엮포한 것이니까 할 필요 없다,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서강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몇 학교라도 후속 작업으로 이사회에서 진행된다면 교육부는 엮포용이니까 하고 전혀 파악 안 하고 있다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진짜로 결의했으면 예산 문제, 교육부 정책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 연동되는 것입니다. 수요 파악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보충질의 있나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신문화연구원에 있는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직원들이 너무 적고 예산이 적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오히려 올해 예산 12억 1000만 원보다 적은 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돼서 4억 9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예산 7억 2000만 원으로 외국 교과서 왜곡 현상을 점검하고 또 시정 자료를 발간하고, 한국을 이해시키는 자료를 개발하고, 민간단체 및 학회와 협력 사업을 하고, 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을 하고, 학술회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해서 할 일이 많은데 사실 지난번에 나도 제의했습니다마는 직원 총 1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문화연구원 보직자 5명하고 임시 계약직이 9명입니다.

이분들로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임시 계약직 직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처우 또한 연봉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수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아울러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는 계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

고보조금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하고, 임시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가 시급한 것 같은데 예산이 오히려 깎이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본들 아무 성과 없이 예산만 깎이고 이래서야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답변 좀 해 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또 직원들 문제, 지금 계약직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우선 살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安商守 委員 예산이 금년보다도 오히려 많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금년보다도 4억 9000만 원이나 깎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40% 이상이 삭감된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한데 오히려 예산을 깎아버리고 이런 일을 해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증액되도록 나중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담당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는 세부 사업이 고구려연구재단 추진 사업하고 얼마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연구재단 사업을 강화하면서 겹친 부분을 줄였다는 대답입니다.

○安商守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고구려연구재단 문제는 고구려사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고 지금 역사 바로 알리기, 외국 교과서에 형편없이 많이 한국 역사가 왜곡되어 가지고 실려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로지 역사 왜곡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 그렇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깎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교육부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증액 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에서 청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의대 교사를 개축하고 있는데 이미 21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35억이 책정됐다고 그러합니다.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니까 향후 소요 예산을 내년에 한꺼번에 편성해 주면, 왜냐하면 대학 병원과 인접되어서 공사를 계속 금년에 절끔하고 내년에 절끔하다 보니까 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 여건이, 내년에 다 해 될 것을 이렇게 절끔절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해 줄 것 내년에 같이 해 줘 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安商守 委員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까 건물이 완공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연도별로 조금씩 책정하는 바람에 공사가 자꾸 지연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떻거든요.

어차피 내후년에 넣을 거면 내년에 함께 넣어 가지고 내년에 완공시켜 버리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심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건물은 이 정도 되어 있어요. 박차를 가해 가지고 빨리 완공시켜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주장이 일리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끔절끔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왕 해야 될 것 한꺼번에 책정해서 빨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번에 수능을 마쳤는데 수능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EBS 수능 강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교재 구입 부담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문제 하나, 예를 들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총 82과목의 교재가 필요하고 또 자연계의 경우에는 84과목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은 저렴하게 하고 있지만 교재를 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EBS 강의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학교 공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공교육이 하는 일은 결국 EBS 교육의 뒤치다꺼리 하는 것, 또 학교 수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가 또 방송 녹화, 방송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면 교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EBS 시청 후에 정리해 주는 학원이 또 생겼답니다. 이렇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거기다 내신까지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내신 교육에 필요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평준화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공교육을 거의, 그야말로 위축시키고 비정상적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국 예비고사 시험 한 번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별로 본고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면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줄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자꾸 비정상적으로 가는 점이 EBS 방송 중에서 약 80%가 출제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교육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업이 항상 중심입니다.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 정규교육 과정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EBS 수능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EBS 수능 강의를 수능 시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자 원천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수업을 소홀히 하면 모든 다른 과정들이 소홀히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수업을 철저히 듣고……

○安商守 委員 EBS에서 약 80% 출제된다면 아무래도 수업이 경시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수업은 100%지요. 수업에서 100% 출제되는 것이고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 요령 있게 강의한 것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반영이 EBS가 80%라면 수업에서는 100%라고 봐야 됩니다. 공교육이 소홀히 되지 않습니다.

공교육하고 EBS 수능 방송은 함께 연계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일부, 예컨대 서울에 있는 사교육 시장에서 EBS 요점 강의 강좌들이 어느 정도 번창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대도시에서 있는 현상이고 일반화해서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商守 委員**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가는데, 결국 교육도 경쟁인데 자출에 맡기고 경쟁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 전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되고 차라리 옛날에 본고사만 그냥 쳤을 때가 오히려 사교육비가 적게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지적하고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부문이 지금 상태로 간다면 2026년도에는 기금이 거의 고갈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의 2005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조 4597억 원으로 2004년 대비 10.2%인 6205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저부담 고급여 체제가 계속되는 한 2026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전망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비관적인 견해가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安商守 委員**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주호 간사와 사회교대)

○**安商守 委員**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지금까지 통계적인 분석에 의하면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이면 부담금보다도 급여 지급액이 초과되는 시점이 되고 2019년에 가서는 총 기금운용 수입까지를 포함한 총수입이 지출보다 미달하는 역전 현상이 생겨서 2026년에 가서는 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예측한 변수를 정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점검 결과 그 당시 예측했

을 때보다도 인구의 노령화가 더 진행되고 출산율은 더 줄어들고 지금부터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다 30년이 넘는 분들이 많아지고 연금 선택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등등을 고려할 때 한 3년 전후로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아주 정밀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방안을 도출해 내고 그래서 가입자들도 좀 수급해서 부담률은 좀 올리고 급여는 줄이고, 그다음에 정부나 학교 경영기관에서도 조금씩 노력해서 이 문제가 불필요한 갈등이 없이 되도록 확고한 과학적 자료를 준비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安商守 委員**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는 없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안 쓰고 마지막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미리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질의서를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한 국가 부담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 또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 부담금과 군 소급 부담금, 국고 학자금대여 사업비 등 연금기금 사용분 및 책임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대안들을 몇 개 지적해 놓았는데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주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저는 앞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현실적인 질의를 중심으로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문제를 정부나 사회에서 공유하고 인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 되어야만 대안이 만들어져서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황 인식을 좀 같이 하십시오 하는 의미로서 현상에 관한 설명을, 질의 중심보다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인 장애인 교육 문제 그다음에 실업교육, 이 두 가지가 복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인 장애인 야학이 지금 전국에 열두 곳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앞의 위원들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한의 교육시설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1994년에 전면 개정되어서, 1994년 이전에 장애인들은 사실상 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러 오면 쫓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장애인들이 태반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01년 현재 장애인들 중 ·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무려 51.6%입니다. 초등학교 이하라는 얘기는 초등학교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무학자들까지 포함해서요. 반면에 고등학교 이상 학력은 32.7%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중에서 전문대 이상은 8.6%, 장애인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8.6%라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야간학교를 방문해 보면 문해능력, 다시 말하면 문장을 해석하고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또 학력 취득 욕구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 보고 싶다는 욕구들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버려뒀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제 버려둔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구 구조상 몇%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등한시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정말 소중하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도 지난 10월 6일인가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것은 교육부가 최초로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에 부총리님

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이런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당장 이들 성인 야학이라든지 성인 장애인 교육에 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부총리님,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 10억 정도만 뭘가 도와줄 수 있으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교육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대학이라든지 중 · 고등학교라든지 공교육 기관 중에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장애인 교육기관들이 야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무료로 빌려준다든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꼭 명심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또는 차량을 무료 제공해 준다든지 선생님들이나 교수들 중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 어렵다고 한다면 정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각종 공교육 기관들을 활용하는 마인드의 전환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요. 그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 간사,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다음에 실업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도 공교롭게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업계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한 교육부의 서면답변이 좀 충분치 않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 성격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실

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약 5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고교생의 약 30% 정도가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들은 생산 현장에서 국가 기간산업을 떠맡치게 할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육부가 답변한 대로 실업교육 예산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따라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구논회 위원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참여와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에 이양한 것을 두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실업교육에 시혜적 차원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학생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이것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실업교육이 더욱 더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시·도교육청도 어떤 시·도교육청은 마음먹고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일반 교육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쪽을 소홀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까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침을 전달하고 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실업교육을 얼마만큼 강화시키느냐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말까지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성안되면 굉장히 치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또 실업교육에 관한 지원 사업이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전 정부적인 차원으로 관심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농업고등학교, 농림 쪽의 실업교육은 농림부가 관심을 갖고 공고는 산자부가 관심을 갖고 과거의 상고들이 IT 쪽, 인터넷 고등학교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정통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관계 부처가 자기 영역의 실업교육에 관해서 집중된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과 지방, 또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실업교육이 입체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금년도에 실업교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5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책정해 놓았나 하고 봤더니 주로 부총리님 말씀하고는 틀린,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거시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대개 미시적이고 협소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예산으로, 말하자면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소프트웨어 쪽……

○구논회 위원 산학연 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진로 지도 방안 같은 것들에 관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 첫째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나 또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은 못갈지언정 국가가 잘 가르치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돈이 없거나 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 반면에 소위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집안이 부유한 학생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마는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생기는 실업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나마 괜찮은 이미지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하고 30%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목고 특성화고 실업계고라는 단어를 없애서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같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들과 별 차별이 없는 학교다…… 정말 특성화된 교육을 실제로 시켜야 되겠고요.

교육부에서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사회 통합이나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일정 몫을 담당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하는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2 플러스 1 체제여서 2년 동안은 학교 교육을 받고 1년 동안은 실험 실습을 해서 현장 교육을 받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30만 명 학생들 중에서 35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 전에는 각 기업에서 인턴들한테 돈을 쥐가면서 데려다 썼지만 요새는 그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현장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기숙사비가 되었던 각종 용돈이 되었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내년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후년에는 편성할 수 있는 연구들도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시적인 연구와 미시적인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정책 연구를 꽤 많이 해서 이번 12월까지 발표되는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그 연구의 결실이 다 나타납니다.

조금만 펼쳐 보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조금 고급화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또 통합 고등학교라고, 아시겠습니까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반계로 진출할 수도 있고 직업교육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학생에 따라서는 전문대학이라든가 일반 4년제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도 트여 있고 또 여기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직업 전선으로 나갈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안고서 교육과정에서 서로 통합교육을 하는, 대개 그 두 개

가 강조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장치가 많이 마련될 것입니다. 예컨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산업 분야마다 직업교육 체계하고 연계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말씀하셨듯이 현장 교육의 경우에 무상은 물론이고 얼마간의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는 체계, 조금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실업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대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방안이 나오고 그때는 국회에서 위원님들께 펼쳐 보이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갑자기 지방에 이양해 놓으면 학벌주의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선출직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성적 중심 또는 대학입학 실적 중심의 인문계 교육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국가가 관장하고 통제를 하고 관심을 갖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하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구논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위원 먼저 사립학교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교과서적인 대책은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10년 동안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각각 14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 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의 정도를 볼 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리에 연루된 많은 대학들이 대부분 입학 정원 2000명 이하 대학들이고 외부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총리께 질의하겠는데 외부 감사를 받

지 않고 있는 286개 모든 사립대학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수수료도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책정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구조개혁이 고등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국립대학 간 통합 3건, 국립대학 간 연합 2건, 사립대학 학과 빅딜 15건, 대학 내 학과 통합 20건을 지원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것인지,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대학이 최근에 물밑 작업을 하면서 통합이라든가 연합 체제 구축이라든가 또는 큰 규모의 학부 간 빅딜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예가 가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이주호 위원 대충 추계를 해 놓으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쪽에서 고등교육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감한 구조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대학에 넓게 펼쳐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대폭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 대학

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 같은 경우에 연합 대학 예산이 1300억 원 요청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편성한 것은 50억이거든요. 턱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통합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원을 확실히 해 주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지킨다면 오히려 구조조정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체로 이주호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면 과감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을 못 했습니다. 1000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볼 때 내년 후반쯤부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대개 실적이 나타나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그다음 질의로 교원 연구보조금 및 성과급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연구보조금과 성과급 예산안을 보면 연구보조금 308억 원, 성과급은 2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보조금의 경우에 국립대학 기성회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보조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또 성과급은 저희가 국감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사실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조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과감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존 국립대학 기성회비에서도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성과급 예산으로 통폐합하고, 그러면 성과급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늘어난 부분을 보다 과감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의 기

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총액을 지급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해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지 저희들이 차등 지급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지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주호 위원 국립대학의 다른 보수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감한 차등 지급을 조건으로 달아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대학 시간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강사료는 예산이 항상 과소 책정됩니다. 그래서 2003년의 경우에 51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결국 교원 인건비에서 256억 원이 전용되어서 실제로는 76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2004년에도 되풀이될 것이고 2005년 예산을 봐도 530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용이 불가피한데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교원 인건비의 책정이 현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정 정원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이 부분을 돌려 가지고 시간강사료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전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규 교수를 뽑는 것에 태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전용을 하지 않게 하고 시간강사료는 시간강사료 예산으로 책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강사료 예산이 기타 수당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고 비정규직 보수라든지 제대로 된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 식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근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다른 나라와 같이 지방 교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교원들이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큰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법률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면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효기간을 둔 이유가 바로 지방 행정 부분을 개선하라는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 쪽은 개선되지 않고 재정 쪽만 법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가 그대로 있는 한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지자체 간의 형평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는 10% 부담하고 경기도는 3.6% 부담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내국세는 19.32%, 시세는 일정%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인건비로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어서 만약 교원 인건비 증가율이 내국세나 시세의 상승보다도 훨씬 상회할 경우에는 결국 경직적인 경비 부분이 증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써야 되는 교육복지 부분이나 지역별로 자유롭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지금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간과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외국의 경우도 의무교육을 꼭 국가가 다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나누어서……

○이주호 위원 거기는 지자체가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라는 말씀을 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곧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선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함께 가야 명분도 있고……

○이주호 위원 그렇습니다. 적어도 계획이라도 발표를 확실히 하고 이 법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아마 곧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준이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기준에 부담했던 것을 도세 내지 시세로 표현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부담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표현된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세나 시세의 증가율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정장치가 대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주호 위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거든요.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특별교부금을 현재 경상교부금의 9% 수준에서 4%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분모가 되는 경상교부금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래도 제법 많이 줄기는……

○이주호 위원 제법 줄긴 줍니다. 맞습니다.

모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5%p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주호 위원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예측하기 힘든 특별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쓰인 것을 보면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계속 규모를 낮춰 가셔야 되고요, 실제로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다 정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동의합니다.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호 위원 마지막은 사실 특별교부금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학력 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1학년 1% 샘플의—고1 같은 경우는 올해 3%로 하지요—학업성취도 평가는 5억 3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학력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초·중등 교육 예산은 특별교부금의 일부나 국고보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서 제 길을 찾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노원갑 출신 정봉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 고생들 많으

셨고요.

부총리님, 교부율 보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려고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교부율 보정을 해야 할 경우 기준액 산출에 있어서 비의무 교육기관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중국적으로 내국세 비율 등등과 관련해서 인건비의 부족분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비의무 교육기관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6조 좀 넘는 것으로……

○정봉주 위원 2005년도 총 인건비를 20조로 추정했을 때 6조 8000억 정도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 자료로는 6조 2837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봉주 위원 이것이 다 추정치지요.

그러면 비의무 교육기관의 인건비가 보정액 산출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정 비율을 1%라고 가정할 경우 한 620억 정도를 보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의무 교육기관 인건비 중에도 기존의 봉급교부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시겠습니까만, 봉급교부금에는 봉급과 교직수당 7개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정봉주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5조가 좀 넘는 정도로……

○정봉주 위원 이것도 추산이지요, 5조 2700억 정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5조 832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봉주 위원 저보다 조금 조금씩 적네요.

그런데 이 인건비도 보정받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해야 됩니다.

○정봉주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이 금액을 하나도 보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자체 흡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봉주 위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비의무 교육기관과 의무 교육기관 인건비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 등등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 620억 정도, 최대 1200억 정도가 보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자체 흡수하는 경우밖에…… 종전의 봉급교부금도 의무 교육기관의 봉급과 일부 수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자체 충당하게 되면 결국 정상교부금, 특히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등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봉주 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의 인건비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때 인건비 보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으로 되어 있더군요,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보정 기준액으로 산정하는 게 대책일 수 있는데 결국 그럴 때도 기획예산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협의해야 됩니다.

○정봉주 위원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법안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만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때도 일정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보정받으려면 사실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점을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정봉주 위원 법안 수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대통령령 정도에서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법안 수정 차원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법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봉주 위원 결국 이것이 교원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봅니다.

○정봉주 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현장의 개선이 라든지……

제가 아까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일주일째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를 돌아보는데 서울은 지방보다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하지만 막상 가 보면 교육 환경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하거든요.

지금도 부족한데 경상교부금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인건비로 흘러 내려가게 한다면 교육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질 것이란 말이지요. 과밀 학급, 과대 학교를 해소할 길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교육 부대 시설도 하기 힘들어지고……

구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인건비 상승 규모와 내국세 증가 비율을 한번 죽 봤어요. 그랬더니 2004년도 현재 인건비 총액이 20조가 아직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육박합니다.

○정봉주 위원 20조에 육박하고 있고……

2002년부터 인건비 상승이 매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1조 5000억……

○정봉주 위원 연간 1조 2000억 정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조금 더 넘을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 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 상승의 원인은 호봉 증가와 신규 채용의 결과인데 2005년 이후에도 상황이 별로 개선될 전망이 안 보여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정봉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20조로 상정하고 연간 인건비 인상률을 8% 정도로 보면 추가 인상분만 2005년도에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2005년도의 교부금 증가액은 7.3%거든요. 그러면 0.7%가 부족한 것이지요. 0.7%면 2700억 원 정도, 그렇지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지방교육재정에는 지방세 전입금, 담뱃값 인상 등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전체 증가액은 1조 7000억 원이 좀 넘을 것으로 대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면 교부금 증가액이 임금 인상분보다 조금 더 넘어간다는 얘긴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봅니다.

○정봉주 위원 1조 어느 정도라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한 1조 7400억 원……

○정봉주 위원 1조 7400억 원 정도면 인건비 추가 상승분이 1조 6000억 원이니까 1400억 원 정도가 더 여유 있게 넘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정봉주 위원 현재 추세대로 2005년도에 내국세를 100조 정도, 교원 인건비를 20조 정도로 가정하면 교원 인건비 8% 상승을 위해서는 내국세 증가율이 11% 내외 정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지금 부총리 말씀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1400억 원 정도의 여유분이 생기는데요. 내국세 증가율을 보면 2004년도에 5.7%, 2005년도에 8.34%, 2006년도에는 8.78%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8%대로 상정을 하면 결국 내국세 증가율이 11% 정도 되어야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년 교부금 증가액,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결국 내국세 증가율에 근거해서 볼 때 인건비 상승 규모를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 계산으로는 내국세 증가율이 8.28% 정도 이상만 되면 인건비 충당이 가까스로 가능합니다. 그래

서 그것을 일종의 임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것이 교육부의 장밋빛 전망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부족분, 인건비 상승, 교원이 증가됐을 경우…… 이를테면 학교의 교원 충원율이 9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기본 권장정책인 이동식 수업이라든지…… 교실이 부족해서 못하고 교원이 부족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교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공무원 총량제에 걸려서 못하고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면 아슬아슬하게 맞춰 나갈 수 있겠지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건비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 충당, 교원 증원 이런 것을 죽 감안해 봤을 때 만약 인건비가 부족하면 경상교부금 중에서 학교 운영비에 투자해야 될 재원이 인건비로 충당된다, 그리고 그것을 교부율 보정이나 이런 것에 맞추려면 종국적으로 기획예산처의 눈치를 봐야 되고, 물론 다른 부처도 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재가를 받아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체로 내국세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보다 높으리라고 우리들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는 이 간극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에 대한 우려는 역시 남습니다.

○**정봉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정책 내부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부율 보정, 교원 인건비 등등에 대한 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교육부 내부에서 가장 절실한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인가 법안 개정으로 갈 것인가를 보았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원들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그럼에 따라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의원 발의가 될지 정부 발의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개정안을 통해서 교부율 보정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책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생각을 더 다듬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니까 2005년도에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2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게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다 연동이 되어 있고 다 맞물려 있어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2개 시·도교육청을 보면 계속 적자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지금 보니까 2005년도의 지방채 발행이 전년도에 비해 53.2%나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결과를 계속 가져오는데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이 대책을 마지막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률 개정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크게 보아서는 교육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 정답입니다.

○**정봉주 위원** 노력의 구체적인 것이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으로 안전망을 확충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구조하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면 법안 개정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까? 방향은 아직 안 잡혀진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영으로 이것을 규제하기에는 기획예산처와의 관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법안 수정이……

○**정봉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교육현장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육환경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데 자꾸 경상교부금 빼가지고 봉급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등의 상황을 저는 악순환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대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봉급 못 주는 사태가 일어나겠느냐고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모든 정책이나 이런 데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15분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부문 사업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규모를 보면 기본경비가 90.3%, 사업비는 9.7%이고 사업비 중에 고등교육 부문은 6.9%, 평생·직업·국제교육 부문은 0.9%, 초·중등 교육부문은 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사업비의 편성 내용을 보면 사업비 예산 2조 7110억 4000만 원의 70.7%인 1조 9175억 원이 고등교육 부문에,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19.7%인 5348억 원, 평생·직업·국제교육 부문은 9.5%인 2586억 원입니다.

2005년도 교육부 총 예산 27조 9660억 원 중에 86.5%인 24조 1941억 원을 초·중등 교육 지원에 또 고등교육 지원에는 6.9%인 1조 9175억 원을 계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초·중등 교육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고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지원 예산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서 걸보기에는 많아 보입니다. 실제 교육여건을 위한 투자가 가능한 예산은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초·중등 교육 부문에 대한 사업비를 더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초·중등 교육비를 고등교육 재정부자와 직접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도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태부족이기 때문에 열악한 정도는 초·중등 교육보다 더 심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보통교육비 대 고등교육비가 우리나라 예산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고등교육비는 많고 보통교육비는 적게 계상되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비는 전부 포괄해서 말씀하시고 보통교육비의 경우는 경직성 경비 다 빼놓고 사업비 일부만 갖고 비교하면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그것은 좀 무리한……

○김영숙 위원 예, 시간 관계로……

다음 초·중등 교육 부문 사업비 중 역사왜곡 대책 지원 사업비 69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연구재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집행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김영숙 위원 고구려연구재단에 대한 지원 예산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부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썽요, 그것은 고등교육 부문……

○김영숙 위원 그것은 고등교육 부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범주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세부사업의 구성 및 추계에 있어 예산 소요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학 구

조개혁 지원사업비 1000억 원과 사업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되는 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사업비 12억 5000만 원, BK21사업의 증액된 200억 원 등 불요불급한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은 삭감하고 이를 초·중등 교육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수준이어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절박한 것이……

○김영숙 위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중등학교에 가 보면 강남 지역에도…… 이것이 어떻게 기자의 눈에 안 잡혀서 보도가 안 되었을까 할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이제 대폭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비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비는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 왔고, 특히 2005년부터는 2004년 1월 제정 공포된 유아교육법에 근거로 2005년 예산은 164.7%가 증액된 641억 7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 5세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보육시설에 비해서 개체 수가 너무 적고, 보육시설 2만 4142개에 비해서 유치원은 8292개입니다. 또 수업일수와 운영시간이 짧습니다. 상당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은 취약 전 유아를 퇴근 시까지 맡아주는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2005년 예산에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산 편성에서부터도 반영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데 향후 만 5세 유아 가운데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유치원 종일반 교육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피력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문대학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대학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80억 예산은 비수도권 전문대학생 수의 1.4%에 해당하는 4000명에 대한 지원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인데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데……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떤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1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구성과 예산 소요가 불분명해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육 부문 예산안 가운데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부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구조 개편을 통한 질적 도약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대학의 입학 정원·인력·조직 감축 등 자율 혁신, 대학 간 교류·연합 체제 구축 및 통폐합 등의 구조개혁 지원사업으로 2005년 예산에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립대학 간 통합 지원에 360억 원, 국립대학 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 지원에 100억 원, 또 대학 내부 구조개혁 지원에 500억 원 및 대학 학문기반 강화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질적 수준은 세계 대학과의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고,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율의 증가는 심화되어 있어 대학 구조조정 시 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본 위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에 대한 우려와 지역대학 간 연합이나 통합이 미진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대학 간 통합지원사업에 3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학교 간 통합에는 건당 120억 원, 단과대학 간 통합에는 건당 20억 원, 또 학부 간 통합에는 건당 5억 원을 지원하

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국립대학 간 실제 통합 실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지금 구체적으로 내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내년 전반기까지는 꽤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고등교육 부문 예산을 보면 아주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국정감사에서 보고 여러 가지 통합 조정 과정 내용을 보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면에서 그 돈을 차라리 보통교육에 가져다가 여러 가지에 쏟아서…… 처음부터 밑거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대학 내부 구조개혁 지원사업의 경우도 국·공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의 경우 특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아니라 입학 정원 감축에 중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화 등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바, 구조조정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대학 중 특성화 계획이 명확한 대학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실질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대학 정보공시제도 도입,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의 퇴출을 위한 법령 정비 및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것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김영숙 위원 또한 동 사업의 경우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부사업의 구성 및 추계에 있어 예산 소요가 불분명해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데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

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불용은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업이 성사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지방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때가 언제라고 기억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뭐라고 한마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해찬 장관 시절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해서 교원을 명퇴시킨 때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는데요.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게 되는 악순환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전혀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현 조건 속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퇴직 교원 평생교육 봉사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원 1인 육성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험과 열정이 풍부한 퇴직 교원들은 나와서도 봉사하려는 의지가 또 대단합니다.

이래서 평생교육, 청소년 선도, 인성교육, 가정교육, 연수 등에 앞장서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고 또 가정의 교육적 기능도 높이고, 정부가 적극 안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보면 퇴직 교원들에 대한 예산으로 10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2005년도에는 다 삭감되고 1억 원만 편성되어서 퇴직 교원들의 봉사활동과 사회 계도에 제약과 위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할 의지가 없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썽요,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이미 짜여진 예산을 다시 세

역까지 하나하나 조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업은 상당히 많이 벌여 놓고, 10억이 책정되어 사업을 했는데 1억만 나오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 세운 사업이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이라도 증액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부 관계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께서 수고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양당 교섭단체 간사님들, 별의 없으시면……

교육부총리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좋고 대신 차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지금 교육부가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을 추동해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또 여러 사업으로 나누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전남대학을 중심으로 연합대학을 구상하면서, 지금 예산을 보면 50억 정도를 했는데 그런 지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완전히 통합하고 정말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경우에 몇백 억이라도 투자하여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른 대학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또 대학 내 무슨 단과대학과 단과대학을 합친다거나 학과 간 통합을 한다거나 국립대학 간 연합을 한다거나 이런 데 돈을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때 또 논의해야 되지만 그야말로 M&A가 제대로 되는 경

우에 500억이라도 투자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5도 국립대 시설확충 예산 총 2449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배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서 해 놓은 것인지 교육부가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 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생이 3만명 이상인 경우에 A급, 학생이 2만 명에서 2만 4000명이면 B급, 1만 6000명에서 1만 8000명이면 C급 이런 식으로 해서 국립대학을 9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의 금년, 앞에 제가 언급했지만 예를 들면 대학 내부 구조개혁 지원 사업의 경우에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의 경우 학부 입학 정원의 15% 이상을 감축한 학교, 또는 공사립의 경우 학부 입학 정원의 15% 감축과 전임 교원확보율을 기준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이지요.

한쪽에서는 학생을 줄이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학생 수 가지고 시설확충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칙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느냐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지병문 위원** 그렇지만 학생을 줄이는 것도 교육부 발표 내용 중 지표 중의 하나로 들어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하나의 지표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지병문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기준으로 하면 A등급인 학교가 서울대 하나입니다. 나머지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전부 B급, C급 되거든요.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시설 보유율이 147%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위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 부산대, 전

남대, 경북대, 충남대 이런 대학들은 100%에도 못 미칩니다. 78%, 8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을 봐도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2160억 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거점 대학 보면 1000억 내외, 1015억, 1074억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설 보유율이 147%인 서울대학은 계속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은 시설 보유율이 법정 보유율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적게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격차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내년 시설 예산 반영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요. 지금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시설 확보율이 어떠한지, 또 학생들의 충원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급, B급, C급 나눈 것을 교육부가 나눈 것입니까, 기획예산처가 나눈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부가 국립대학에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5억, 10억씩 주면서 7건, 8건의 건물 공사를 시작해 놓고 5년, 7년, 8년 갑니다. 하나도 완공을 못하고 계속 새로 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결코 해소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보기로 하고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가능하면 신규를 막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을 완공하도록 했다는 것은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잘못 해 온 부분이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6월인가, 7월에 처음 상임위 열

렸을 때도 지적했고, 국립대 시설 문제에 대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보다는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주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지적했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학술진흥재단 사업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 부분을 죽 읽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 이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읽어 봤습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합동 연구랄지 국내외 지역 연구랄지 이런 연구들이 소위 일 자리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학문의 내실 있는 연구가 안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80억 원 정도가 학문 후속세대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는데 차라리 매년,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국립대학이 법정 교수 확보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교수를 정규 교수로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든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 사업이 정말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2개가 연결되어서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을 가져다 달라고 제가 세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해서 온 것이 뭐냐,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정책과에서 온 거예요. “조치 사항, 면담 실시 등 연구 과제 선정 절차의 보완, 면담 심사 추가, 중간발표 의무화,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 전액 회수”가 답변이라고 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임기응변으로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조치사항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의, 전혀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술진흥재단 국정감사 할 때 이 분야 관계 책임자에게도 얘기했더니 본인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술진흥재단 내부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러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고, 면담 실시를 하겠다는 식이 대안입니다.

차관님, 어찌실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더 챙겨 보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안 오면 이 예산 국회에서 깎아버립니다. 효율성 없는 예산, 삭감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진짜 연구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새로이 학술연구 조성사업 계획을 짜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다른 데 효율적인 데로 돌려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부가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해 가지고 7개 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들이 348억 8800만 원 되는데 이 중에서 166억, 즉 48%로 콘텐츠 제작비가 많습니다.

주로 초중고 교과용 콘텐츠랄지 또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중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차관님, 그것 좀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지병문 위원** 중복 가능성이 좀 있고, 특히 EBS 수능 강의가 상당히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대상의 교과까지도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콘텐츠의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e-러닝 지원 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이고 사이버 가정 학습에서는 초·중학생들의 자율 학습용 수준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방통고 같은 경우는 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이 다르고 중복을 피하려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과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같이 개발하면 되는데 별도로 자꾸 진행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용하고 학생용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교사용하고 학생용 이렇지 말고 초등학교 부분은 때서 교사용과 학생용을 동시에 개발하고 또 EBS 수능 강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복이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사업으로 보면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EBS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간 제가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위원장 황우여** 이제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11쪽에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초·중등 교육 투자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업성취도가 제고되었다고 하시면서 초·중등 학생의 국제경쟁력은 OECD 국가 수준을 능가하여 OECD는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성취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PISA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성과라고 한다면 공공재정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요?

○**진수희 위원** 예.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차관님, 이런 결과가 공교육만의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공공 투자의 결과라고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렇게 단정적으

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공교육의 성과보다는 사교육의 성과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교육과 사교육의 효과를 넷트 이펙트(net effect)만 추출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거칠게 단순화를 하자면 형평성은 물론 평준화 체제에 기초한 공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수월성 부분은 결국 사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교육부나 평준화 체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데 저는 분명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전하게 교육재정 투자의 성과로만 발표하시면서 호도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앞으로 이렇게 내놓지 마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재정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최재성 위원** 원래 2006년도까지 5개년 연속 사업으로 됐었는데 2004년도 올해 예산이 누락되어 가지고 국민 성금으로 5억을 충당했거든요. 16대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논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의 특위가 수행하는 반민족행위자 조사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현재 수행 중인 일제하 단체나 인물 연구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제 식민통치 기구와 관변단체 그리고 인물들을 포함한 식민지 지배와 수탈 구조의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특위가 수행하는 반민족 행위자

조사와는 질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 준비기획단이 발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제하의 단체나 인물연구 사업도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 봅니다.

○**최재성 위원** 행자부의 입장은 뭐예요? 충분히 다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준비기획단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틀과 내용이 다른데 제목이 엇비슷하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다가 중단시켜 버리고 결국 국민성금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던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서 공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보는데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교재나 교구비거든요. 그런데 1원당 한 106만 원 수준입니다. 예산으로는 20억이 조금 넘고요. 유일하게 직접 지원하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복무할 수 있는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160만 원 정도로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사립유치원 쪽 말씀이지요?

○**최재성 위원** 예.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이 항상 한계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또 사립유치원 지원 문제가 나올 때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학교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투명하게 잘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가 주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런데 일단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서 공교육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그런 판단

을 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 책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물론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당 분야의 질서들이 안 선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가적 책임과 이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이고 또 예산 규모가 수십억 수백 억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몰라도 최소한의, 이왕 지원할 거면 저는 단위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분명히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하지 말던가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더 연구를 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시간강사 수당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수당이 너무 형편없다고 봅니다.

국립대학 기준으로 보면 3만 6000원인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최재성 위원**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그동안 시간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시간강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을 확충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해당 시간의 노동행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고 이분들도 학문을 연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가 최소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립대도 따라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아까 부총리님 답변이 좀 그랬는데 한국 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이상진 씨가 지금 어느 학교입니까? 공립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회장 하시겠지요? 교장 선생님은 교육장으로도 갈 수 있고 교육 관련 정무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국장으로도 갈 수 있고 상당히 고위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1월 7일 집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만약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학교정책실장님이 당해 집회에 가서 연설을 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본적으로 공립학교 교장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재성 위원** 특히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무원으로서 연설을 했거든요. 이것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의 교장선생님이라서 그렇지 만약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이것은 똑같은 행위입니다.

아까 제가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지 않고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존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원 단속도 못 하면서……

이것은 주의 주장의 시시비비 문제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고 두 가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육부총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지원 과정에서 예산이 대개 특별교부금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국회나 감사원 결산심사 과정에서 연례적인 특별교부금의 문제들이 여러 번 지적되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연례적인 특별교부금 식으로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성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

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내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한일합방이었던 을사보호조약 100주년이 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탈 중국 하는 근·현대사의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도 있고, 해방 60주년이 돼 가면서 산업화·민주화가 진전되어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해서 국교정상화 40주년 이런 것이 가지는 남은 문제와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위해서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난 지도 이제 5주년 되는데요.

연대적으로는 짧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총리실에서 종합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거나 주체하거나 크게 후원하는 측면에서 교육학술 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개최할 필요가 있거든요.

산하기관에서 하든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주관하든 그런 예산들이 특별사업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라든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들을 볼 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짚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현재 특별하게 검토한 것은 없고 다만 인적자원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역사적인 의미와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서 똑같은 행사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특별사업으로 이 문제들을 교육인적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 문제가 동북아에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못 했는데 충북대학교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별 지원이 없다가 2004년에 일정 액수가 지원되고 2005년부터 다시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 차원에서 충북대학교병원이 차지하는 의료 비중과 관련해서 보면 열악한 재정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도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물론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전체 총 규모 내에서 삭감하고 늘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두 가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동의하는데 예산의 삭감과 효율적 재편성 부분에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은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EBS 강의 지원 예산에서도 일정한 지원액을 삭감하고 그 해당분만큼, 여기 147억 정도 교재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편성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구노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노회 위원 오랫동안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7월인가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2005 예

산설명서에 보면 고구려연구재단에 25억을 계상했다가 지금은 60억으로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2005년도 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대책비는 작년의 20억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부총리께서는 기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나 경상비가 빠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예산심의를 처음 하는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정책들이나……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든지 또는 사회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에 편승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충질의를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여론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책의 부침이 굉장히 심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2002년도 4월에 일본에서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제가 줄여서 앞으로는 ‘새역모’라고 표현하겠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채택 운동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구논회 위원** 그런데 일본의 교과서 채택 주기가 대체적으로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내년도가 이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이 되는 주기입니다. 저는 지금 왜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서 부침이 심한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구려연구재단에는 25억 계상했다가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니깐 60억으로 갑자기 올리고 바로 내년에 이렇게 심각하게 일본 교과서가 채택될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국민적 관심에서 떨어져 있으니깐 거기는 빼고……

지금 새역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001년도 0.39%의 참담한 패배를 극복하고 교과서 10%를 채택하게 함으로서 화려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섬뜩한 표현을 하면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구가 폐쇄됐기 때문에 10억밖에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은…… 새로운 대책과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좀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본의 양심적 세력들을 동원해서든 이것을 막아내야 될 절

체절명의 순간인데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잠시 잊혀졌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당초에 중국의 동북공정 예산이 25억이 되었던 것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고 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60억으로 예산 조정과정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제가 내년의 일본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일본 정권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파 쪽으로 우향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에 정치적 판단으로 새역모 교과서를 보류했던 지방의 많은 교육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해는 우파 쪽에 편승해서 밑에서는 채택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 내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의원들이 이 교육위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양심적이라고 했던 출판사인 일본 서적이 도산했다고 하고 오오사카 서적도 수뢰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새역모 쪽, 극우파 편에 서 있는 후소샤라고 하는 출판사는 상당히 입지가 강화되어서 지금 활개를 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 복기왕 위원님, 박창달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구논회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결과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 부수법안들인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앞서 말씀드린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出席委員(17人)

구 논 회	권 철 현	김 영 숙	박 창 달
백 원 우	복 기 왕	안 상 수	이 균 현
이 인 영	이 주 호	정 봉 주	조 배 숙
지 병 문	진 수 희	최 순 영	최 재 성
황 우 여			

○請暇委員(2人)

유 기 홍 정 몽 준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류	충	현
전 문 위 원	천	병	호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안	병	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영	식
차 관	서	남	수
차 관 보	구	관	서
기 획 관 리 실 장	윤	웅	섭
학 교 정 책 실 장	김	광	조
인 적 자 원 총 괄 국 장	정	중	수
인 적 자 원 개 발 국 장	이	중	갑
인 적 자 원 관 리 국 장	박	경	재
국 제 교 육 정 보 화 국 장	정	영	선
공 보 관	김	왕	복
감 사 관	류	영	국
학 교 정 책 심 의 관			

교육복지심의관	정	석	구
비 서 실 장	우	승	구
총 무 과 장	황	홍	규
정 책 보 좌 관	하	연	섭

○其他參席者

대한민국학술원장	황	인	철
사무국장	이	만	열
국사편찬위원장	이	종	서
교원징계재심위원장	나	종	화
국제교육진흥원장	김	용	욱
국립특수교육원장	윤	덕	홍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이	승	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	김	평	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박	판	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주	자	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차	현	직
한국사학진흥재단	황	대	준
이사장	이	기	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성	상	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	수	한
총장	김	현	종
서울대학교병원장	박	돈	규
경북대학교병원장	양	두	현
전남대학교병원장	김	승	택
진료처장	성	인	환
부산대학교병원장	박	철	수
전북대학교병원장	김	상	림
충북대학교병원장	김	근	우
충남대학교병원장	장	장	석
기획조정실장	장	영	일
경상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강원대학교병원장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